

# 2022년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정기종합 감사결과

## I 감사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기관운영 실태, 지도 및 경제사업의 추진 적정성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

###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수협중앙회(본회) 및 5개 회원 조합\*  
\* (선정기준) ①경영위험평가 4등급 조합(인천, 김제), ②민원발생 등 물의 야기 조합(영광군), ③최근 8년간 미수감 조합(제3·4잠수기, 정치망)으로 선정
- (감사범위) 2020년 9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 3. 감사기간 및 인원

- (수협중앙회) '22. 9. 19. ~ 9. 23., 10. 4. ~10. 7. / 감사담당관 외 4명
- (회원조합) '22. 9. 26. ~ 9. 30. / 감사담당관 외 31명  
※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 18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8명

### 4. 감사 중점사항

- 조직·인사·예산집행 등 기관 운영의 적정성 여부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여비 및 정책자금 집행 적정성 등 선심성 경비집행 여부 등
- 수산정책자금 집행, 공제사업 관리의 적정성 여부
-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대출 및 자산관리의 적정성 여부
-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 II 감사 결과

### < 수협중앙회 >

#### ① 자회사 경영평가 부적정

- 수협중앙회는 「자회사 경영평가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자회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자회사 임직원의 급여(상여금 포함)·임원인사 및 포상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 한편, 수협중앙회는 자회사 경영성과와 연동한 인센티브 상여지급을 위해 자회사별 사업내용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동 평가지표를 '20년도 자회사 경영평가에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요령 개정(안)을 마련('21.3.31)하여 5개 자회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21.6.14.)하였으며, 개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자회사에 통보 완료('21.8.31.)하였음
- 그런데, 수협중앙회는 개정된 요령의 평가지표를 반영한 '20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일부 자회사 임원이 성과급 감소 등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된 요령의 평가지표를 '21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요령 재개정('21.10.12.)을 추진하였음
-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요령 재개정을 자회사 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하고, 개정 이전 평가기준으로 경영평가를 재실시하여 성과급을 증액 지급\*하였음

\* 평가결과 수협 □□□□□ 임원에게 당초 3,896천원에서 22,446천원으로 18,550천원 증액 지급되었으며, 다른 자회사 임원 및 직원의 성과급 변동사항은 없었음

- ➡ **(신분상)** 개정된 「자회사 경영평가 요령」에 따라 평가가 완료·통보된 결과를 자회사간 협의절차 없이 평가지표 적용시기를 유예하고 이전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재실시 하는 등 자회사 경영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훼손한 관련자(3명)에 대하여 “경고” 조치 요구(**경고 3**)

## ②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이행 부적정

- 수협중앙회는 국제 수산박람회장 내 홍보관 및 수출기업관을 제작하여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수산식품을 홍보하고, 수산식품 수출공략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 한국관 운영 대행용역\*” 등 3건의 박람회 운영대행 용역을 추진함

\* 용역비/용역기간 : 204백만 원(국고 100%) / '21. 10. 14.~ '21. 11. 5.

-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문성, 특수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요령」에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수협중앙회는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도,
- 위 3건의 용역 모두 입찰자가 1인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안서 평가 절차 없이 단독응찰한 업체와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기획재정부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 이에 따라 단독 응찰한 업체가 입찰공고 및 해당 요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등 계약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 **(신분상)** “2021년 ◇◇◇◇◇◇◇◇ 한국관 운영 대행용역” 등 3건의 용역 추진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관련자(1명)에 “경고” 조치 요구(**경고 1**)

### ③ 임직원 신원보증보험제도 개선 필요

- 수협중앙회는 「복무규정」, 조합 「인사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하여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별도로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신원보증규정」을 두고 있음

\* 2022년 기준 7,951명 가입 / 납입보험료 연683백만원(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부담분)

- 「임원신원보증규정」에 따라 일부 조합은 임원배상책임에 대해 연대보증 성격의 신원보증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현재 조합임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은 30명임

- 그런데, 일반법인 「신원보증법」의 내용(고의·중과실 행위에 한정 / 배상액은 같은 비율로 분담)과 비교할 때 신원보증인의 의무를 과중하게 규정(모든 손해 부담 / 연대보증 방식)하고 있었음

\* 국가에서는 2012년부터 연대보증을 정책적으로 최소화하고 있으며 수협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할 대체제도(보증보험)도 운영하므로 人보증 자체에 대한 유지 필요성 검토 필요

- 수협은 현재 직급별로만 차이를 두어 보험 보장금액을 일괄적용(1급 : 1억원/이하 : 5천만원)하고 있으며 이 때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금은 수협 예산으로 전액(중앙회)내지 일부(조합) 지원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5년간 신원보증보험 청구사례를 보면 상호금융, 경제업무가 사고발생 빈도와 발생액의 대부분\*을 차지

\* 신원보증보험 청구 전체 31건 중 27건, 사고금액의 98%를 차지함

- 따라서 현재 방식보다 직무별 신원보증 필요성을 우선 검토한 후 담당업무 위험도에 따라 보장금액을 차등(현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임

➡ **(행정상)** 관련 제도 존치를 포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원보증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검토 요구(**통보 1**)

➡ **(행정상)** 신원보증보험 지급사례, 업무별 관련도를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통보 1**)

#### ④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주체 관리 및 성과점검 부실

- 수협중앙회는 수산식품 해외 진출 및 정착을 위해 수산식품 앵커숍\*을 해외 10개국 15개소('21년)에 운영하고 있으며, 앵커숍 운영자에게는 임차·장치, 홍보비, 시식행사 등 비용을 최대 65백만원까지 국고 지원함

\* '국내 수산식품의 해외 진출 및 정착을 위해 닛을 내린다'에 비유

- 수협중앙회 해외무역지원센터는 매월 1회이상 앵커숍 매장 현장 점검 및 사업성과를 관리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업무 지침 변경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도시 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무역지원센터에서는 월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대체하였음
  - 수협중앙회 「2021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개선(안)」에 따라 앵커숍 운영자는 코로나-19로 현장시식이 불가능한 경우 50명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마켓테스트(제품인지도, 소비자 반응, 지역 적합성 등)를 온라인 행사로 대체하고 시식리뷰도 20명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나, 5개 무역지원센터에서는 마켓테스트 시식리뷰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업관리를 소홀히 함
- ➔ **(행정상)** 해외 현장여건 변화 발생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회 사업계획에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요구(**통보 1**)
- ➔ **(신분상)** 중앙회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무역지원센터 업무담당자(4명)에게 “주의” 조치 요구(**주의 4**)

#### 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제도 운영 개선

-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보호를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법인에 위탁처리 하고 있음

\* 연도별 양식보험 현황(건/지급액(백만원)) : ('20)1,364/33,194 → ('21)359/10,761 → ('22.8)157/2,417

- 그런데 최근 3년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현지조사) 관련 지역별 손해사정법인 배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주요 권역(충남/전남/경남 등)별로 일부 법인들이 매년 중복하여 참여하고 있었음
- 이와 관련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르면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군·구에 대하여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내용을 손해평가요령(해수부 고시) 및 업무 방법서(수협) 등에 반영해 필요시 교차·순환평가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 ➔ **(행정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교차손해평가’와 관련한 근거조항을 반영하도록 요구(**개선 1, 소득복지과**)
- ➔ **(행정상)** ‘교차손해평가’ 시행에 대비한 절차 및 방법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업무방법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통보 1**)

## ⑥ 어업경영조사 업무 개선 필요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지침」에 의하면 조사원은 각 표본체에 월별 조업상황 및 수지상황을 어업경영조사표에 의하여 매월 현장 방문 조사하여야 하고, 점검실적 증빙·확인을 위해 출장명령부와 어업경영 조사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표본체 조사는 조사항목 누락, 추가조사 필요 등의 경우가 아니면 월 1회 방문이 적정하므로 과도한 방문으로 어업인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고, 어업경영 조사일지 작성은 조사내용과 항목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그런데, 수협중앙회에서는 조사원별 월 5회\*이상 현장방문을 의무화하고 있어 각 조사원별 담당하고 있는 표본체 수에 따라 AA수협은 월 2.5회, BBBB 수협은 월 1회 방문하는 등 차이가 있어 통계품질 저하와 어업인 불편·부담 발생 우려 등으로 불합리함

- 또한, 일부 회원조합의 조사일지 작성은 조사내용 및 조사항목과 무관한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음

\* 조사수당을 10만원으로 고정하여 5회 방문 하도록 의무화 함(여비 2만원 × 5회)

- ➔ **(행정상)** 조사원별 담당 표본체 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원별 조합 방문횟수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필요(**통보 1**)
- ➔ **(행정상)** 어업경영 조사일지가 조사내용 및 조사항목과 무관한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조사원 교육 등 실시 요구(**통보 1**)

## ⑦ 하자검사 이행 소홀

-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시설공사업무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수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 185건 중 13건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후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23건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후 만료검사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 한편, 요령 제18조에는 만료검사 실시시기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어 만료검사 적용시점(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일 이후)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 앞으로 만료검사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검사에 관한 관련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검사 실시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18.12.31. 개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실시

- ➔ **(행정상)** 「시설공사업무요령」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료검사 실시시기에 대해 관련규정 등을 준용하여 명시하도록 요구(**통보 1**)



- ➡ **(신분상)** 시설물 정기검사 및 만료검사를 지연하여 실시한 관련자(2명)에 “주의” 조치 요구(**주의 2**)

⑧ 「중양회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이행 필요

- 수협중양회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수협중양회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시행('22.5.19)함
- 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르면 중양회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받도록 규정함
- 그런데, 지침이 제정된 '22. 5. 19. 이후 진행된 물품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한 총 116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 처리를 미흡하게 하고 있음

- ➡ **(행정상)** 「중양회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을 누락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통보 1**)

⑨ 중양회 정규직 전환제도 운영 개선

- 수협중양회는 노사합의('11)에 따라 특별인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고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연도별 정규직 전환인원(명) : ('17) 10명 → ('18) 8명 → ('19) 7명 → ('21) 7명
- 그러나, '17 ~ '21년 정규직 전환 추진사항을 확인한 결과,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 마련없이 특별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21년에는 '17 ~ '20년과 다른 합격 결정기준으로 변경 적용하는 등 임의적 결정으로 인한 채용 공정성 훼손이 우려됨



- 아울러, 유사기관(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는 전환고시 제도를 미운영하거나 폐지하고 있으므로 유사기관 사례 및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제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검토 필요
- ➡ **(행정상)** 유사기관의 정규직 전환제도 운영사례를 감안하여 동 제도의 계속 운영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전환고시 제도 유지 필요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 등을 규정에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요구**(통보 1)**

## < 회원조합 >

### [인천수산업협동조합] : 6건

#### ① 어업용 면세유류 지도·점검 부실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등에 의하면 조합은 면세유류 취급 주유소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①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② 유종별 면세유류 공급실적은 매월, 급유소 및 주유소 지도·점검 실적은 분기별로 관할 어업관리단장에게 실적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인천수협은 2019. 9. 이후부터 2022. 9. 감사일 현재까지 면세유류 취급 주유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없었으며, 매월·분기별로 서해어업관리단장에게 면세유류 공급 및 지도·점검 실적 보고도 하지 않음
- ➔ **(행정상)** 면세유류 취급소 지도·점검 및 어업관리단장 월별·분기별 실적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통보 1**)
- ➔ **(신분상)**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소 지도·점검 및 실적보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4명)에 “주의” 조치 요구(**주의 4**)

#### ②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이수 필요

-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의하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인천수협의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을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법정의무시간인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부부서에서는 10~15분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한 부서가 '20년도 33.3%, '21년도는 37.1%에 불과한 실정임
- ➔ **(행정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의무 교육시간 미 충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통보 1**)

### ③ 매취사업 장기체화 재고자산 관리 철저

- 「수산물 유통·판매 업무방법서」 제5편(매취업무)에 의하면 장기 체화(滯貨)된 재고자산에 대해 별도의 판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비축 수산물은 수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다만, 일시 다확성 어종 또는 수요시기 집중어종 예외 가능)
  - 아울러 인천수협은 일시 다확성 어종에 대한 적절한 물량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2년의 보유기간 및 판매기간을 설정’한다는 품의\*를 득함      \* 내부품의[유통이용-111(2020.08.06.)호]
  - 그런데, 인천수협에서는 2022년 현재 코로나19 등 소비심리 하락에 따른 판매 저조로 감사기준일 현재 꽃게, 낙지 등 3,419,498천원의 재고자산을 2년 초과하여 장기간 보유하고 있음.
- ➔ **(행정상)** 2년 초과 장기체화 재고자산 손실 최소화를 위한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체화 재고자산이 조기에 처분될 수 있도록 요구(**통보 1**)

### ④ 지정거래인 외상거래 한도관리 소홀

- 「경제사업 채권업무방법서」 제7조에 의하면 거래처에 대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상거래한도를 정하여 거래를 하여야 하며, 외상거래한도는 거래처와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인천수협에서는 AA상사와 꽃게를 외상으로 거래하면서 한도초과액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반복적으로 외상거래를 허용함에 따라 감사일 현재 거래한도를 298,189천원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음
- ➔ **(재정상)** 외상거래에 대한 추가담보물 확보 또는 외상거래한도가 초과된 판매미수금(298백만원)에 대하여 조속히 회수하도록 요구(**시정 1**)
- ➔ **(신분상)** 지정거래인 외상거래 한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2명)에게 “경고” 조치 요구(**경고 2**)

## ⑤ 어업경영자금 취급 부적정

- 「어업경영자금운용요령」에 의하면 어업경영자금의 융자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인당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 중 계속하여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운용지침」 등에 의하면 어업경영자금의 융자기간 연장 시에는 어업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기간 중 6개월 이상에 걸쳐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 수산물 판매실적, 원금 상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수협은 어업경영자금의 융자기간 연장 시 어업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융자기간 중 조업실적이 60일 미만(45일)에 해당하는 부적격자에게 정책자금 대출기간 연장조치함
- ➔ **(행정상)** 부당하게 취급(융자기간 연장)된 대출금 1건, 13,000천원을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통보 1**)
- ➔ **(신분상)** 어업경영자금 융자 부적격자에게 융자기간을 연장처리한 업무 관련자(1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 요구(**주의 1**)

## ⑥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업무 관리 소홀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지원자금의 용도는 어선어업의 경우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구입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고선의 경우 목선은 선령이 8년, 강선·FRP선은 15년 이내인 대상에 한하여 지원토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인천수협은 수산업경영인이 구입한 어선이 중고어선(FRP선)으로 선령 15년 기준을 초과해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자금을 지원함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관기관은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정상화 조치를 미이행 할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수산업경영인, 관할 시·도 및 수협은행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산업경영인이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업 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 급여를 받고 있거나 본인의 어업종사분야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등

- 그러나, 인천수협은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을 받은 어업인이 수산업경영인 취소사유에 해당됨에도 사업주관기관 통보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미이행함

➔ **(행정상)** '가'항 관련 부당하게 취급된 대출금 1건, 14,200천원에 대해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통보 1**)

➔ **(행정상)** '나'항 관련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인천광역시)에 통보하고 그 회신내용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통보 1**)

## **[김제수산업협동조합] : 6건**

### **⑦ 직원 채용절차 이행 미비**

○ 중앙회 「조합인사업무처리요령(안)」에 따르면 시험위원이 응시자의 친족일 경우 해당심사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 「채용관리 업무편람」에서도 면접시험 사전에 응시자의 친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김제수협에서는 2020. 8. ~ 2022. 9. 까지 정규직 8명, 계약직 8명 등 총 16명의 직원 신규채용 절차를 추진하면서 면접시험위원에 대한 응시자 친족여부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행정상)** 조합 직원 채용시 시험위원의 응시자 친족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 조치 요구(**기관주의**)

➔ **(행정상)** 향후 채용절차 추진시 친족여부 확인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서약서 등) 확보 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요구(**통보 1**)

## ⑧ 조합 고정자산 관리 미흡

- 조합 「고정자산 관리규정(예)」에 따르면 각 회원조합은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기타자산으로 나눠 등재·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김제수협은 고정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할 기타자산(사무실 임차 보증금(5개소), 차량(3대) : 가액 6.3억원)을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고정자산로 미등재하는 등 소홀히 관리하였음
- ➔ **(행정상)** 조합 임차보증금, 차량 등 고정자산 등록 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 조치 요구(**기관주의**)
- ➔ **(행정상)** 미등록된 고정자산을 수협 자산등록시스템(바다로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운영하도록 조치 요구(**통보 1**)

## ⑨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관리 소홀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하면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 등을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 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사업주관 기관(김제시)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김제수협으로부터 2019년 귀어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귀어업인(AAA)은 정책자금으로 양식장 신축부지를 구입하였으나 당해 부지를 부당사용(농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른 대출금 회수(5천만원) 등의 조치가 필요함
- ➔ **(행정상)** 귀어 창업자금 부당사용 발생사항을 사업주관기관(김제시)에 통지하고, 회신내용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 요구(**통보 1**)

## ⑩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어업인후계자) 대출 취급 부적정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수산업경영인 중 어업인후계자가 증·양식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종자(패) 및 친어

(모패, 모하 등) 구입비 지원은 대출 집행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침에 따르면 대출집행금액의 50%는 시설사업비(대출금액) 이하로 집행가능

- 그러나, 김제수협에서는 어업인후계자(BBB, CCC)에게 종자(패) 입식자금을 대출집행 가능금액의 50%로 지원해야 함에도 입식금액 전액을 대출하여 적정 용자한도를 초과(46,070천원)하여 집행하였음

➔ **(행정상)** 적정 용자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한 대출금 46,070천원을 정부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통보 1**)

➔ **(신분상)**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용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취급한 관련자(6명) “주의” 조치 요구(**주의 6**)

## ⑪ 어업경영자금 대출절차 부적정

- 「어업경영자금운용요령」 제8조(용자대상자 선정)에 따르면 어업경영자금 용자대상자는 어업경영자금용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기관의 장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임이사(의장), 어촌계, 시·도 수산사무소, 어업인 후계자 등 5인 이상 7인 이하 구성

- 비조합원 용자대상 어업인의 경우 「정책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수협은행 대출취급점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로 동종어업을 영위하는 업종별 수협 또는 지구별 수협 상임이사(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조합은 전무)가 ‘회원조합 어업경영자금 용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김제수협에서는 비조합원 어업인 DDD 등 2명에 대해 ‘회원조합 어업경영자금 용자협의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정하여 어업경영자금을 지원하였음

➔ **(행정상)** 부적정한 절차로 지원된 대출금 40,000천원을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통보 1**)

➔ **(신분상)** 어업경영자금 대출절차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2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 요구(**주의 2**)



## ⑫ 영업점장 특인대출 관리 부실

-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에 따른 채무자 자격제한 대상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신용여신 취급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동일인당 1천만원 이내(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2천만원 이내) 영업점장의 책임 하에 특인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 특인대출의 경우 3년간 원리금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취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경기여건 변화 등 영업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부실발생 이후 여신잔액의 80%이상 회수한 경우’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김제수협은 '19. 2. 13. 차주(EEE)에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업점장 특인대출 20,000천원을 취급하였으나, 채무자가 '20. 12. 22. 이후 연락 두절상태로 19,900천원의 최종 손실이 발생하였음
- ➔ **(행정상) 영업점장 특인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출 취급자에게 별도 변상책임을 요구하도록 조치(통보 1)**

## [제 3,4구 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 5건

## ⑬ 계약직 채용 절차 업무 미흡

- 수협중앙회 「계약직직원운영요령(안)」 등에 따르면 직원채용 시 신규채용계획에 서류, 면접 등 채용 단계별 심사 및 합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잠수기수협은 '21. 1. 인사위원회에서 신규직원 채용계획을 의결하면서(일반 1명, 계약직 1명) 채용단계별 세부적인 심사 및 합격기준을 정하지 않았음
- 그 결과 '21. 4. 계약직 채용을 진행(서류심사)하면서 서류전형 응시자(남2, 여1)에 대해 서류심사표 등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서해지소의 지리적 여건(보령시 오천면 소재) 및 잦은 출장, 어업인 지도·선상 경매 보조 등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접후보자를 결정함

- ➡ **(행정상)** 향후 신규채용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 및 합격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통보 1**)
- ➡ **(신분상)** 채용업무를 소홀히 진행한 관련자(1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 요구(**주의 1**)

#### ⑭ 비상임임원 회의 참석 여비 재산정 필요

- 조합 「임원보수규약」에 따르면 비상임임원이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상임임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협 「여비 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 여비를 산정할 때 일비(2만원) 및 식비(3식 기준 /2만5천원)는 정액으로, 운임 등은 실비지급 하도록 규정함
- 그런데, 잠수기수협은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임원 각 1인에 대하여 식사 제공, 근무지 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회의 참석 여비를 상임임원 수준 정액(15~25만원)으로 일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 비상임임원은 여비 외 회의참석 수당을 예산으로 책정하여 별도 수령하고 있으므로 여비는 실비보전 개념으로 책정함이 타당
- ➡ **(행정상)** 현재 비상임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여비금액을 수협 여비규정에 맞게 적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통보 1**)

#### ⑮ 면세유류 재고관련 유량계 기록관리 소홀

- 「유류공급사업요령」에 의하면 공급대행 주유소 등 타인시설물을 이용하는 유류 재고량에 대하여 유류담당 과장급 이상 책임자가 주 1회 이상 실측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1호(재고유류점검확인부) 및 제30호(유량계 점검 기록부) 서식에 기록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유량계 점검 기록부에 기재하는 유량계상 출고량과 유류수불부 상 출고량이 불일치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잠수기수협에서는 유량계상 출고량과 유류수불부상 출고량을 함께 기록관리 하여야 함에도 유량계상 출고량만 기재하고 있어

출고량 불일치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필요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등 유량계 점검 기록부 작성을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음

➔ **(신분상)** 출고량을 상호 비교할 수 없는 등 유량계 점검 기록부를 미흡하게 관리한 담당자(3명)에 “주의” 조치 요구(**주의 3**)

## ⑩ 어업경영자금 부실채권 발생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잠수기수협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결정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업무를 이행하고 있음

○ 또한, 「신용보증면책기준」에 따라 잠수기수협(수탁자)이 신용보증서의 자금용도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출금의 자금용도를 다르게 실행하였을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은 면책되어 잠수기수협은 대손판정 신청금액 전액을 불인정 받게 됨

- 그런데 잠수기수협은 2016. 6. 24. 차주 A에 대해 어업경영자금 용도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2016. 6. 2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대출을 실행하면서 제3자 명의(차주 B)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대출금으로 대체 상환하였음

-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의 자금용도(어업경영자금)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대출금의 자금용도(제3자명의 대출금 대체 상환)를 다르게 실행하여 자금용도를 위반함으로써 관리기관으로부터 대손판정 불인정을 받아 25,500천원의 조합 손실을 초래하였음

➔ **(재정상)** 자금용도를 위반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손판정 불인정을 받아 조합 손실을 초래한 관련자(2명)에 대하여 변상책임액(2,550천원) 회수 요구(**시정 1**)

## ⑪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업무관리 소홀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관기관은 수협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정상화 등 미이행 시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수산업경영인, 관할 시·도 및 수협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산업경영인이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업 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 급여를 받고 있거나 본인의 어업종사분야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등

- 따라서, 잠수기수협은 수산업경영인이 지원받은 대출금 부당사용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그런데, 수산업경영인 FFF, GGG의 조업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 어선을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행정상)**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사업주관기관(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에 통지하고 그 회신내용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통보 1)**

## **[전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 : 2건**

### **⑱ 계약직 직원 채용절차 업무 미흡**

- 「조합인사업무처리요령(모범안)」에 따르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 서류심사기준을 정하여 서류전형 실시하여야 하고,
  - 면접전형 평가기준 및 배점에 대해서도 방침에 의하여 정하고, 면접위원별 점수는 면접위원을 비실명처리하여 면접위원 전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정치망수협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응시자 3명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선발하였고,

- 면접전형 배점기준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정치망수협에서 이전부터 사용하던 기준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하였음
- 또한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별 점수를 면접위원을 비실명처리하여 면접위원 전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채용 절차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 **(행정상)** 관련규정 및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전형을 실시하고, 채용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통보 1**)
- ➔ **(신분상)** 계약직 채용절차를 미흡하게 실시한 관련자(2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 요구(**주의 2**)

#### ⑱ 냉동창고 이용·보관 외상거래 관리 소홀

- 정치망수협은 냉동창고(보관 400톤/동결 12.9톤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원 소유의 고등어, 생사료(잡어 외) 등의 수산물을 동결 및 냉동 보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수산물 유통·판매 업무방법서」에 따라 창고이용·보관료는 현금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외상거래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상거래 약정(냉동·냉장 시설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하여야 하며, 미수 이용·보관료는 보관물품 시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그런데 정치망수협은 현재 이용 미수금(HH수산 외 4건 / 40,232천원)에 대하여 외상거래 약정체결 없이 외상거래를 하고 있으며, 그 중 II수산의 이용 미수금(21,788천원)은 보관물품 시세총액(18,986천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행정상)** “냉동·냉장 시설물 이용계약(외상거래 약정)” 체결없이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임치자들에 대하여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통보 1**)
- ➔ **(행정상)** II수산의 보관물품 시세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이용 미수금에 대하여 회수 또는 보관물품을 신규 유치토록 요구(**통보 1**)

##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 6건

### ⑳ 법인카드 사용기준 미준수

- 조합 「기관운영비 사용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 집행시 법인카드 전표에 사용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빙서류에 집행내역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영광군수협에서는 법인카드 전표에 실명 서명을 누락하고, 지출내역서에 사용자 명과 집행사유 및 집행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 ➔ **(행정상) 법인카드 전표에 실명 서명을 누락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시 증빙자료에 사용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기관운영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경고” 처분 요구(기관경고)**

### ㉑ 계약 사무처리 부적정

- 조합 「계약규정(예)」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규격서 및 설계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공고를 통한 경쟁입찰로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경쟁계약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 공사, 5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계약, 조합이 납입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와의 계약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
- 그런데, 영광군수협은 「보조사업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중 경쟁입찰이 의무화 된 계약(12건)을 제외한 총 43건의 계약 모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제2냉동공장 로우레시버 및 액펌프교체’(99백만원) 계약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물품 구매에 해당되어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 ➔ **(신분상)** 계약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2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 요구(**주의 2**)

## ②② 직원 채용절차 이행 부적정

- 영광군수협은 「인사규정(모범안)」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신규 채용계획(채용인원, 채용방법, 합격자 결정 등)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여야 함
- 그런데, 영광군수협은 수도권 3지점 개점에 필요한 신규직원 총 6명(정규직 2·3급 2명, 4급 2명, 계약직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채용계획 심의·의결('20.10.8.) 후 공고하였으나,
  - 정규직 채용 직급(2·3급, 4급) 구분 없이 채용서류를 통합 접수하여 심사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함('20.10.31.)
  - 또한, 면접전형 결과 정규직 2·3급 채용 적격자가 없어 인사위원회는 채용직급 조정 및 인원을 변경(정규직 2·3급 2→1명, 4급 2→3명 축소)하는 것으로 의결('22.11.2.)한 후, 재공고 없이 정규직 4급 3명, 계약직 2명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진행하였음

- ➔ **(신분상)** 신규 직원(정규직) 채용계획 및 모집공고와 다르게 채용서류를 접수하고, 채용과정 중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직급 및 인원 변경 후 재공고 없이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등 직원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진행한 관련자(4명)에 대하여 “경고” 조치 요구(**경고 4**)

## ②③ 예약판매 관련 물품 보관관리 소홀

- 「수산물유통·판매 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예약물품\* 보관은 조합 시설에 보관함이 원칙이며, 예약(주문)자와 예약자 본인 및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보관시설에 예약물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무 및 신용상태가 건실한 대량 수요자, 중도매인 등으로부터 예약(주문)을 받아 판매

- 특히, 예약(주문)자가 예약자 본인 등 보관시설에 보관중인 수산물을



몰래 빼돌리는 등 부정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약물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그런데, 2019. 2. 7. JJ F&B(대표자: KKK)로부터 멸치, 까나리 품목에 대한 예약판매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 시설이 아닌 JJ F&B 소유의 보관시설에 예약물품(멸치, 까나리 액젓)을 보관함

- ➔ **(행정상)** 예약물품을 예약(주문)자와 관련 없는 보관시설로 옮기거나 예약물품의 출고 방지 대책(CCTV 설치 등) 마련시 예약(주문)자 본인 등의 보관시설에 보관 허용하는 방안 등 검토 요구(**통보**)
- ➔ **(신분상)** 규정을 위반하여 예약(주문)자 본인 보관시설에 보관토록 조치한 예약판매 업무 관련자(3명)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주의 3**)

#### ②④ 영업점장 특인대출 취급 부적정

-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영업점장 특인대출은 영업점장 책임으로 동일인당 1건만을 운용하며, 동일가계 내 구성원 등의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특인대출 한도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영광군수협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2014. 6. 30.)을 통해 영업점장 특인대출 한도를 2천만원 이내(동일인 1건)로 결정함

- 그런데, 영광군수협 신남동 영업점장은 동일가계 내 구성원(LL과 MMM, 부자지간)에게 각각 2천만원씩 특인대출 2건을 취급하여 특인대출한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함

- ➔ **(행정상)** 특인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금 2천만원을 회수 조치 요구(**시정 1**)
- ➔ **(신분상)** 영업점장 특인대출 업무를 부적정하게 취급한 관련자(1명)에 대하여 “경고” 조치 요구(**경고 1**)

## ㉔ 어업경영자금 대손보전금 처리 부적정

-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운용지침」 등에 따르면 어업경영자금의 융자기간(1년) 연장 시에는 어업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체 여부, 원금 상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융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선어업) 융자기간 중 6개월 이상에 걸쳐 60일 이상의 조업실적 보유  
(어선어업 외) 어업경영주로서 수산물 및 소금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

- 한편,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고의·중과실로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은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대손보전이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대손보전 이행금액 등을 관리기관에 반환하도록 규정함
- 그런데, 영광군수협은 어업인(NNN)의 어업경영자금 융자기간 연장 시 어업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금 전액을 기한 연장 처리하여 부적격자가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음
- 그러나, 회수가 불가능한 부당취급 대출금은 대손보전 신청이 불가하나 이를 관리기관에 신청('17.2.11., 9백만원)하여 대손보전 처리함('17.3.31., 6.9백만원)

- ➡ **(행정상)** 부당수령한 대손보전금 6,881천원을 관련 규정에 의거 대손보전기금 관리기관에 반환하도록 요구(**통보 1**)
- ➡ **(신분상)** 어업경영자금 융자업무를 부적정하게 취급한 관련자(1명)에 대하여 “경고” 조치 요구(**경고 1**)